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장기화...정부-광주시 갈등 격화

광주시·국힘 광주시당, 오늘 예정 ‘예산정책 협의회’ 무기한 연기 보훈단체 등 사업철회 집회 예정...시민단체 “차질없는 추진” 촉구

광주시가 추진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보훈단체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훈단체와 4·19 혁명 3개 단체, 5·18 일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광주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여론이 양분되면서 ‘정율성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따르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정부-여당과 광주시의 논쟁이 격화하면서, 오는 30일 예정됐던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 예산정책 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에 대해 광주시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과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의 차담회 형태의 협의를 정책 간담회로 확대해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쟁으로 정책 협의 자체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기되면서 아예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철회 요구로 시작된 논쟁이 여야 정쟁으로 확대됐고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율성 역사공원’을 반(反)헌법·반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건립을 중단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율성 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이념 논쟁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과연 어떤 역사를 기리고 이어받을 것인가를 묻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거론하며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익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단 한 톨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율성 기념사업 협회를 촉구하는 보훈단체 집회도 예정돼 있다. 30일 낮 12시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보훈단체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

회가 열린다. 4·19혁명 3개 단체(민중혁명회·혁명희생자유족회·공로자회)와 8개 보훈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집회에는 회원 6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5·18 공방단체 3곳 중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일부 단체는 9월 1일 까지 사흘간 집회를 열어 광주에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음악가 정율성의 기념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에 시작한 사업으로, 보수정권에

서도 여·야 이견 없이 진행됐다”며 “보훈부 등은 정율성이 의열단 단원으로,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일본과 싸웠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외면하고 그의 생애 중한 단편만을 부각해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시달려 온 해묵은 이념적 잣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콘텐트의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의 방제작·극우적 사고와 퇴행적 역사인식으로부터 촉발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더 이상 철 지난 이념과 색갈론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최권열 기자 cki@/유연재 기자 yjyou@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km까지 달려도 된다

어린이 통행 적은 밤 9시~아침 7시 등·하교 시간은 30km 규제 강화

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의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30km 속도제한 표시판.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중앙·광주 청년정책조정위 간담회...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 주재 중앙·광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가 29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조정실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광주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고 정책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 의견수렴 강화 방안, 지방 시대를 위한 청년의 역할, 광주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이어 청년 취·창업 활동 지원 거점 공간인 ‘도타도타 청년 일자리 카페’를 방문했다. 광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기반한 기구로 광주시청을 비롯한 당연직 실·국장과 청년정책 활동가, 청년 전문가 등 위촉직을 포함해 23명으로 구성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명절엔 ‘최대 30만원’ 가능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온라인상품권·문화관광권도 허용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격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편소 선물 가격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을 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트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광권이 여기 해당한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역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영암·강진에 농촌형 스마트 복지·안전마을 구축

취약계층에 IoT돌봄 플러그·AI 안부 전화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공모사업’에 영암군과 강진군이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형 스마트 복지·안전마을 공동체’ 구축에 나선다. 이번 공모사업은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주민 생활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와 안전의 최일선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서호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사물인터넷(IoT) 돌봄 플러그 설치, 마을 안전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스마트 행정안전복지센터를 만든다. IoT 돌봄 플러그는 평상시 전력 사용량

데이터 등을 분석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송해주는 시스템이다.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지원해 고독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군동면에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 인공지능 안부 전화 등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안심 돌봄단도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복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축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매매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 수령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2)

- 발전사업예고
 - 발전소명 : (유)지도상생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 영암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1698-7번지) 27필지(총 28필지)(면적 1698-10, 1698-8, 1698-9, 1699, 1699-11, 1699-12, 1699-14, 1699-16, 1699-18, 1699-2, 1699-4, 1699-6, 1699-9, 1700, 1700-11, 1700-14, 1700-18, 1700-19, 1700-2, 1700-20, 1700-7, 1700-9, 1701-4/광장면 1614, 1614-1, 1614-6, 1614-7)
 - 발전소 면적 : 418,460㎡
 - 공고기간 : 2023.08.24~2023.08.31(8일간)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 40,980kW
 - 사업시행계획일 : 2026년 08월
 - 사업운영기간 : 2026.08.01~2046.08.31(20년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지도상생태양광발전 대표이사 유영훈
- 주민동의서 제출
 - 기간 : 2023.08.24~2023.08.31(8일간)
 - 의견제출방법
 - 전화 : 02-6253-8000 팩스 : 02-6253-7777
 - E-Mail : help@soulenergy.co.kr

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3차)

당 법인은 2023년 6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1일자로 해산을 결의하였고, 2023년 7월 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당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장덕동)
청산인 최 대 범
(062-960-2671)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2차)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2023년 6월 27일 임시 결의로 2023년 7월 18일자 해산결의로 2023년 7월 18일 해산등기 또는 완료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채권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채권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 채권신고기간 : 2023. 10. 9.까지 (광주과학기술진흥원 3층 민원사무실)
- 채권신고방법 : 직접방문
- 채권신고서류 :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유 의 사 항 :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시 민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62-609-0350

2023년 8월 30일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청산인 김용승

공 고

아래의 각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조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피상속인의 표시
 - 피상속인 : 방 최영선 (580710-XXXXXX)
 - 사건번호 : 2023노단230
 - 등록기준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곡길 101
 - 최후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곡길 101 전성원
 - 사망일자 : 2023. 03. 25
- 위 각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재권 또는 수증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알립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표시
 - 상속재산관리인 : 최영선 이상열
 - 주소 및 신고처 : 목포시 정미로 22 302호 (목포동, 세종법조빌딩) ☎ 061242-3000

2023년 8월 30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 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